

총론

1. 공동연구의 배경

이 책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1930년대까지 근 440년간의 서울 상업의 변천을 시대별로 다룬 논문 8편을 모은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상업사란 제목을 붙인 책이 출간된 적은 없다. 서울이 조선왕조의 수도가 된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상업의 변천을 통시대적으로 고찰한 책은 비록 논문집 형태나마 이 책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

서울은 조선왕조 이래 민족사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상업부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서울 상업사에 관한 전문 연구서가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상정된다. 먼저 상업사란 연구 테마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지속적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근대 서양학문이 수용된 이래 우리의 전통 상업에 대한 학자들의 인식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다. 우리의 근대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래 기본적으로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한 역사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인식아래 상업사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일어나기란 쉽지 않다. 근대화의 실패는 곧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전통 상업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 강점을 구가하던 시대의 일본 어용학자들은 실제로 우리의 전통상업에 대해 거의 멸시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일제의 식민주의 역사학에 맞선 우리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전통 상공업을 주목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상공업에 대한 발전적 시각은 8·15 해방 후 1950년대에 들어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후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사상사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다. 일제하에서 주목되기 시작한 실학을 근대적인 사상적 동향으로 평가하는 업적이 1950년대 초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 배경으로 1954년부터 일기 시작한 중국역사학계의 이른바 홍루몽 논쟁에 자극을 받으면서 경제사에 대한 이해도 점차 적극화 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 들어와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한 조선후기 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1950년대 후반에 북한학계가 이른바 부르조아 민족형성론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우클라드가 개항전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그 결과가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진행된 자본주의 맹아론의 관점에서 거두어진 조선후기 상공업 발전의 실상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실제로 상업사뿐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상을 새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개항전 자본주의 맹아 형성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 대두하였다. 그 비판의 주체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로서, 이들은 일제 식민지 아래서 취해진 여러 상공업 정책이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개항 이전의 자본주의 맹아의 형성같은 것은 비록 실재하였다 하더라도 의미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견식을 표했다. 1980년대 이래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어디까지나 학계 일각의 견해로서, 이에 대한 학계의 거부감은 강하게 존속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 입장이 곧 조선후기의 상공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양산을 동반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에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자본주의 맹아론의 입장을 가깝게 계승한 입장으로는 근대 이행론, 중세사회해체론을 들 수 있는데, 이 입장은 상공업사보다는 농업경제, 농민사회의 동향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입장은 1980년대의 반독재 투쟁의 “현실적” 과제 인식과 관련되었다. 즉 민중사관에 뿌리를 둔 근대 이행론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민중은 어디까지나 농민이기 때문에 이행의 모습을 농민사회, 농업경제에서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하간에 1980년대 이후 학계의 상공업사 연구에 대한 열기나 관심은 크게 식어가고 있었다.

이 책에 논문을 기고한 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상공업사에 대한 연구가 소홀시 되어가고 있는 학계의 분위기를 반성하면서 1990년대 초에 자리를 함께 하였다. 역사인식에서 관점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각기의 관점의 “정당성”에 집착한 나머지 실재한 사실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들의 목표는 조선후기 상공업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검토하면서 『備邊司謄錄』의 상공업사 관련 자료를 뽑아 함께 읽는 것이었다. 나중에 大字學術財團의 지원을 얻기 위해 조선후기상공업사 자료윤독

회란 호칭을 붙였지만 연구회로서의 조직성을 띤 적은 한 번도 없다. 그저 한달에 두 번씩 모여 순차대로 준비해온 발췌된 자료를 읽으면서 의문점과 논평을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모임은 『臚錄』의 상공업 관계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의 연구사적인 반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즈음 필자는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변화」(『韓國社會發展史論』, 1992, 일조각)라는 제목으로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사 정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작업에서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간의식을 크게 결여하였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조선후기 신분변동에 관한 연구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에는 필시 큰 차이가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한 구분의식 없이 접근한 결과, 신분변동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엇갈린 사실을 발견하였다. 상공업사 관련 자료를 읽으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간 구분의식이 더 엄밀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자료 독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공업사 관련 자료는 모두 뽑되 상공업의 발달정도가 가장 앞서서 서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상공업사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연구는 이렇게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어떤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상정하지도 않았다. 자료를 읽는 것이 각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모임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그런데 1994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학연구소가 수립되어 서울 상공업사에 관한 연구 과제 수행에 관한 교섭이 왔다. 우리가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지역 연구로서 서울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어느 한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쉬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공동연구는 이런 내력으로 진행되어 얻어진 결실이다.

2. 15-19세기 전반기 서울 市廛商業의 성립과 변천

이 공동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조선왕조 개창에서 개항 이전까지 약 4세기 반의 기간의 서울상업을 시대별로 다룬 연구, 제2부는 1880년대부터 일본, 서양의 상품과 자본이 침투하기 시작한 이후 일본 강점 하 1930년대까지의 서울 상업의 변모를 다룬 연구성과를 각각 수록하였다. 아래에 각 연구

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전체의 짜임새를 총괄해본다.

서성호의 「15세기 서울 都城의 상업」은 조선왕조 초기에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뒤 서울상업의 틀이 어떻게 짜여졌던가를 다루었다. 주지하듯이 서울 도성내의 시전 행랑은 태종 재위중에 건설되었다. 이 논문도 그 행랑 건설의 과정과 규모를 소상히 밝혔다. 1360간을 훨씬 넘는 규모의 행랑이 운중가(종로 1가)-누문(종묘 입구) 구간, 종루(종각)-광통교(광교) 구간에 배치되고, 여기에 시전이 들어섰다. 서울상업은 향후 수백년간 이 곳에 자리잡은 시전상인들이 중심 역할을 했다. 시전의 상업은 수공업 생산자인 工匠들이 제품을 직접 판매했던 형태와 富商大賈로 불리는 대상인에 의한 것 두가지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행랑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商稅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였으며, 초기 시전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一物一廳의 형태였던 것을 밝혔다. 시전은 大市와 일반 시전으로 구분되어 대시는 특히 왕실이나 기타 지배층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물품을 주로 거래하였다고 한다.

서울에는 행랑 구역 외에 五部 坊里의 곳곳에 閭閻小市가 자리 잡았는데 이 연구는 이를 非市廳系로 파악하였다. 여항 소시의 坐賈들은 면세였으나 같은 비시전계이면서도 시전 행랑 주변 가로에 자리 잡은 상인들은 상세를 부담했다고 한다.

시전의 구성에 대해서는 물종별 배치 여부에 초점을 두고 고찰했다. 그 결과, 고려말 開京에서부터 확인되는 물종별 배치를 서울에서도 추구했을 것이나, 시전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종별 시전의 배치가 성종 16년에 移市 조치를 통해 추진된 사실의 포착이 이런 파악을 가능하게 했다. 태종대의 공랑 건설 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추진된 이 시 조치에 대해 상인들은 심한 저항을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상인들의 동업조직의 가능성도 추출했다. 시전의 동업조직은 정부의 통제와 비시전 상인들의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 무렵 시전들은 서울 도성내로 유입되는 물화에 대한 買集權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고찰에 의하면 성종대는 서울 시전상업이 본 궤도에 오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장에 따라 시전 자체의 결속력도 높아졌지만, 한편 정부의 통제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였다. 京市署(세조 12

년, 1466년에 平市署로 고침)에 의한 시전감독체제는 고려시대부터의 것을 답습해 국초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성종대에는 司憲府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다가 18년 12월부터 漢城府가 시전 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정부와 시전의 이러한 상호 대응관계에서 볼 때 18세기의 금난전권같은 것은 전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기의 시전은 一物一廳의 원칙아래 私自賣買 즉 각자가 자유로이 상품을 매매하였다.

이태진의 「16세기 국제교역의 발달과 서울 상업의 성쇠」는 성종대에 골격을 잡은 시전 중심의 서울상업이 그 이후 어떤 변화상을 보였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변화상을 국제교역을 중심으로 살핀 것은 이 시기의 서울상업이 이로부터 받는 영향이 가장 컸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15세기 말 이후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국제교역의 발달은 이전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사실이지만, 교역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구명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또 서울 상업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었다. 성종대는 앞 서성호의 연구에서 서울 시전 상업 발달의 한 획기로 나타났지만, 국제교역 발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곧 국내상업의 발달이 국제교역의 발달로 바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3국중 倭商의 활약을 특히 주목하는 한편, 野人(여진족)이 毛物 수출로서 한·중·일 삼국의 교역체계에 참여한 사실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성종대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교역관계는 종종 초까지는 비교적 순탄한 발달상을 보였다. 三浦, 서울, 義州, 北京으로 이어지는 국제교역망에서 교역 중심역할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 서울 富商大賈였던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새로운 발달상은 의외로 단명의 기운을 보였다. 16세기 초반에 이미 위기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중국에 대해 상대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교역품의 접수를 강요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이 파탄의 시작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 중종 5년(1510) 三浦倭亂 이후 조선, 중국 연안에 수없이 출몰하는 왜구들은 이 시기의 국제교역이 이미 파탄에 직면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16세기 동아시아 국제교역의 파탄은 교역의 논리 그 자체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삼포왜란 발발 이듬해부터 서울에는

쌀값이 급등한 상태에서 賑恤廳이 상설화 되다시피 한다. 이른바 小氷期의 장기적인 자연재해가 국가의 상비곡을 바닥나게 하여 비상체제로 들어갔던 것이다. 농업생산력을 급격히 떨어뜨린 소빙기 자연재해가 국제교역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야인쪽의 毛物이 조선, 중국 양쪽에 수요가 높은 상품이 된 것도 그 특별한 기후조건과 무관하지 않았다. 거둬들이는 흥황으로 기근이 연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국제교역은 상급 신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사치품 위주가 될 수 밖에 없었고,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떨어진 가운데 약탈적 분쟁이 계속되어 파탄적 국면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것이 곧 1592년의 일본의 조선 침략전쟁(임진왜란)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6세기 서울상업은 국제교역의 발달을 배경으로 성쇠를 거듭했지만, 시장 구조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단지 상인과 권세가들의 유착관계가 갈수록 심해졌던 것이 이 시기 상행위의 취약적 특성으로 드러났다. 국제교역의 새로운 재화가 관료와 상인 개인의 치부의 대상이 된 것은 3국 공통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다. 교역의 새로운 재원이 이렇게 사적인 치부의 수단이 되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로 발전하지 못한 데는 중국의 조공책봉무역체제의 고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본래 17세기까지 다루기로 예정되었으나 내용적인 분량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밝혀둔다.

18세기 서울상업에 대해서는 고동환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한상권의 「英祖·正祖의 새로운 상업관과 서울상업정책」 등이 수록되었다. 두 논문은 18세기를 주 대상으로 했으나 대개 17세기 후반에서 起論하였다. 그리고 다 같이 18세기 서울상업의 구성관계상의 변화를 주목했지만, 고동환이 시장의 구성과 유통관계에 치중하고, 한상권은 상업정책 쪽에 비중을 두었다.

고동환의 연구는 서울의 시전제도가 종래의 시전이 국가에 대한 의무 부담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는 달리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 상주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가 중심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고, 시전상인과 비시전계 상인 양자가 함께 성장, 대립하는 관계를 살폈다. 18세기 전반기의 경우, 서울상업은 市廛系 상인의 발전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

시서 市案에 각 시전의 주관 물종들이 자세히 기입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시전 상인의 禁亂塵權이 강화되면서 시전상인의 이익은 더욱 커졌고, 일용 소비품을 판매하는 시전들(미전, 어물전, 생선전 등)이 도성안의 본전 외에 도성밖에 많이 설치되었던 것을 지적하였다. 이런 추세가 본래의 종로의 시전상가 외에 남대문 밖 칠패시장(17세기 후반), 이현시장(18세기 중엽), 소의문밖 시장(19세기 전반)의 형성을 가져왔다고 한다. 신설 시전들은 수공업자들에 의해 설치되거나 私商세력들이 평시서나 권세가와 결탁하여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품 거래를 통한 것보다 비시전계 상인에 대한 금난전권의 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컸던 것을 밝혔다. 따라서 영세소시민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는 크게 억제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정부는 18세기 중엽부터 지속적인 通共政策을 추진하였으나, 1791년 신해통공조치 이전까지는 시전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별무 성과였다고 한다. 그 결과 17세기 전반기에 30여개에 불과하던 시전은 18세기 말에 120여개에 달할 정도로 확대 일로였다.

18세기 서울상업의 또다른 변화로 店舖 상업이 성장한 점을 들었다. 시전 외에 약국, 煙肆, 懸房, 책방, 그림가게 등의 점포들이 도심 곳곳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음식점, 주점, 색주가 등의 각종 서비스업이 번창하고 馬契 運負契 등의 하역 운수업, 藏冰業 등이 독립적인 영업분야로 발전한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파악은 이 시기 서울 상업을 종래 단순히 시전과 사상의 대립구도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크게 반성하게 한다.

사상의 성장은 대체로 18세기 후반에 본격화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교통의 발달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되기 시작함에 따라 서울의 상권도 확대되어 도성 외곽의 송파, 누원, 광주, 수원, 개성, 강화 등지까지 이르면서 서울로 반입되는 물품의 유통체계도 크게 변동하기 시작하여 시전상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상들의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 것을 밝혔다. 1791년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을 부정하는 辛亥通共은 곧 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시전 체계의 붕괴와 사상체계의 성립은 곧 서울 상업의 본질적 변화로서, 이는 사상의 성장이라는 측면외에도 점포상업과 수공업, 상업적 농업의 발달, 상가와 상권

의 확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상권의 연구는 이 시기 서울 상업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종래에는 수도 서울의 상업이 17세기 이후 금난전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가 18세기말 신해통공의 실시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이해체계 아래 신해통공의 의미를 크게 부각하였다. 즉 官商에 대한 私商의 승리를 의미하는 이 통공조치를 계기로 봉건적 상업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상업이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전상업이 금난전권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英祖, 正祖의 상업정책에 대해서는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한 탕평정치의 기본이념이 상업정책에도 그대로 작용하였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두 왕은 모두 國富와 民安을 위해 국가가 상업유통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貨權在上論과 一視之民의 이념하에 도시 小市民과 小상품생산자 보호를 추구한 소민보호론을 견지하여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주목하였다. 먼저, 영조의 경우, 화권재상론으로 貢市人詢廩 제도가 실시되고, 公과 均의 이념 아래 市塵都賈가 폐지되고 통공정책이 실시되는 관계를 파악하고, 1741년(영조 17)에 공시인순막제도 시행, 도고금지, 통공정책 시행 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새로운 상업정책의 요체를 포착하였다. 정조대의 신해통공은 사실은 이러한 여러 상업정책들을 종합화 한 것으로, 소상공 생산자의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도시 소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에 중점을 두고 취해진 조치라고 해석하였다.

종래, 시전의 금난전권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파악이 없었다. 한상권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파악을 가졌다. 즉 조선초기 이래 서울의 시전은 사사로이 각자 물건을 사고파는 私自賣買 체제가 주류였는데, 17세기 이후 市案에 물종을 등재한 시전인이 물종 전매권을 행사하면서 금난전권이 새로이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전이 금난전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주요하게 지적한다. 즉 시전이 창설되지 않아 물종을 전관하는 廳人이 없거나 시안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물종은 이전처럼 자유매매(通同發賣) 방식으로 장사하였고, 금난

전권이 수세권으로 바뀌어 非塵人이 塵人에게 납세하고 화매할 수 있는 應稅和賣의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간적으로는, 18세기 초엽에 시안이 정비되고 1730-40년대 들어 시전 貢人契 창설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금난전권에 기초한 專賣가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通賣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신해통공으로 다시 금난전권의 시전이 큰 타격을 입은 반면, 통동발매는 이미 통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영향권 밖에 있었고, 응세화매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 주류적 흐름은 응세화매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의 고동환의 성과와 함께 18세기 서울상업의 실상에 대한 종래의 이해를 크게 바꾸어 놓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석규의 「19세기 前半 서울 시전상업의 동향」은 『비변사등록』의 「貢人·市人 詢覈」에 관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신해통공 이후의 시전상업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순막자료는 1753년(영조 29)부터 철종연간까지 빠짐없이 매년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료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소 형식적인 행사로 되어가는 약점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추세 속에서도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활용자세를 구했다.

앞의 18세기에 관한 두 논고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신해통공은 도거리에 의한 물가 등귀를 잡겠다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통공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衆民公供의 이익을 위해 도거리를 금지한 것이지, 기존의 이해처럼 “난전의 허용”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서 大商人의 출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대상인의 출현은 오히려 19세기 세도정권하에서 벌어진 공적기구나 결탁한 사적 권력의 행사를 통해 가능하였던 것이지만, 세도정권은 또한 자유 대상인의 창출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 19세기 상업발달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식되었다. 통공으로 시전의 금난전권은 부정하면서도 시전에 國役을 맡기는 시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전체제와 국가재정 양면이 모두 한계에 직면한 것이 19세기 상업이 처한 기본적인 부정적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시대적 조건에 대한 이러한 인식 위에 통공의 실시와 시전체제의 유지라는 모순된 정책의 전개과정 및 그것이 어떻게 파탄으로 귀결되는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세기에 시전상인들은 통공이 유효한 가운데 끊임없이 금난전권의 복구를 요구하여 사실상의 금난전권의 복구로서 여러 가지 변형적인 수세권의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1818년의 「戊寅節目」이 이러한 변화에 획기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새로운 통공조치가 뒤따랐다. 시전체제하에서 금난전권의 행사를 위해 새로운 상업활동은 시안 외의 물종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데, 시전들은 신상품 개발보다 수입을 통해 신상품의 명목을 확보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1836년의 「丁酉決處」는 통공조치의 하나로 수입물종에 대한 자유판매를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하는 큰 단서가 되었던 것으로 구명되었다. 그리고 1846년의 「丙午통공」은 육의전 외에 筵稟과 草記에 의해 금난전권이 복구된 시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 물종에 대해 통공매매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통공정책의 계승이라는 의미를 가졌으나 세도정권이 이를 실현시킬 의지가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18세기 탕평군주들의 이념을 관철하려는 군주의 입장과 사상도고를 손발로 활용하여 치부하려는 세도가문의 사적 도모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호 모순되는 정책이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상업구조 전반이 큰 혼돈 속에 빠져든 것이 19세기 前半의 서울상업 아니 전국 상업의 현실이었다고 한다.

서울상업의 골격이었던 시전체제는 19세기 전반기의 시점에서 정부가 應役체제를 유지시킨 것이 시전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지원을 계속되게 하여 국가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모순을 낳았고, 시전상업 자체도 누적된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대외무역과 국내상업의 실권은 사적 권력을 매개로 한 사상도고들의 수중에 집중되었지만 그것도 세도권력에 기생적이었기 때문에 외형만 부풀려진 거품과 같은 것이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상업은 전반적으로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곳이 없었다는 것이 이 논문이 주목한 중요 쟁점이다

이상 5개의 논고의 결과에 의하면, 약 4세기반 동안 서울의 상업은 변천을 거듭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업활동의 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1) 15세기는 시전을 중심으로 서울 상업이 틀을 잡은 시기, (2) 16세기는 서울 상업이

동아시아 삼국 등의 시장에 연결되는 확대의 시기, (3) 18세기는 서울의 도시화와 전국적 경제력의 향상을 배경으로 한 내적인 재도약의 시기, (4) 19세기 전반기는 다시 변모된 국제교역체계에 노출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3)이 내적 발전과 함께 새로운 체제의 형성기라면 (2)(4)는 그 내적 발전이 국제교역에 노출되어 흔들리는 동요기라고 할 수 있다. (2)의 경우, 때마침 닥친 소빙기의 장기적인 자연재해로 동아시아 각국 상업이 모두 침몰하는 속에 있었지만 특히 조선의 상업이 겪는 파행은 컸던 감을 준다. 서울상업 아니 조선시대의 상업 전반이 국제교역에서 어떤 특장도 발휘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취약한 형세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삼을 비롯한 주요 교역품을 중심으로 좀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발전적 의의가 부여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서울 상업이 18세기에 정부와 상인의 관계를 넘어 도성민 아니 국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로 확대 발전함에 따라 小民보호의 차원에서 새로운 상업정책이 탕평정치의 일환으로 피해진 것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균분적인 경제의식은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그 발전성이 인정되는 것일뿐더러 현대 한국인의 의식 한쪽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균분적 정책이 순수히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발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18세기 이후에 관한 세 개의 논고가 다같이 통공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린 것은 균분적 소민보호의 상업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상업에 대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에 대한 파악은 어용 특권상인과 자유상인의 대립 구도로 모든 것을 본 종래의 이해체계를 크게 바꾸어 놓는 것이라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성과는 『비변사등록』의 관련자료를 오래 동안 독파한 데서 얻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부해보고 싶다.

3. 개항 이후 서울 상업의 재편과 '식민지' 상업으로의 전락

개항이후 일본 강점기까지는 세편의 논고밖에 실지 못했다.

첫 번째, 이헌창의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은 서울상업이 개항 후

강제병합(1910년)까지 일본, 서양의 상품과 자본에 노출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폈다. 변화의 주요 계기로는 (1) 1882년의 서울의 開市, 1883년의 인천 개항 (2) 철도망의 성립 등을 설정했다. (1)을 통해 서울이 외국상인의 활동무대가 되고 무역시장권에 편입되면서 일어난 변화, 러일전쟁 후 (2)의 완비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난 변화를 각각 살폈다.

이 연구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서울의 구매력을 먼저 검토하였다. 서울의 인구 증가 상황, 서울 거주 대지주들이 가진 구매력, 무역품이 낮은 판매가격으로 창출한 수요력과 새로운 소비습관 조장 등을 먼저 살폈다. 그리고 서울이란 공간에 새로 자리잡는 외국인 인구, 즉 청일전쟁 전의 중국인, 러일전쟁 후의 일본인이 급증하는 동향도 서울의 새로운 구매력으로 고려되었다. 뿐더러 서울시장이 가지는 배급력도 주목했다. 기선, 철도 등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확립되면서 당초에 개항장 상인의 손을 거쳐 수입되던 화물이 점차 서울상인의 직접 거래로 전환하는 상황도 살폈다. 서울이 개시장이 된 이래, 상품 집산은 꾸준히 확대되어, 인천 수입액의 약 반이 서울 상권에 유입되고, 러일전쟁 이후 철도연대 수송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거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인 구매력의 증가와 결부되어 서울의 수입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기선의 수송편의로 국산품이 서울에 유입되는 양도 계속 증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지적도 함께 붙였다. 즉 개항 이후 서울시장의 확대를 초래한 주된 요인이 외래적인 것이 되었던 상황에 조용하여 서울의 상권은 외국상인에 의해 잠식되어갔다. 외국상인은 외국인 수요의 확대, 수입품 비중의 증대, 근대적 교통 통신설비의 활용, 불평등조약의 특권 등에 의거해 서울의 상권을 점진적으로 장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었고 러일전쟁전까지 국내품의 유통량이 위축된 것 같지 않으므로 한국상인이 입은 타격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상인간에도 기선과 철도를 이용하고 수입무역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이주가 급증하고, 철도수송이 본격화하여 일본과의 직무역이 확대되는 상황이 새로운 판도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런 새로운 판도 구축 속에 국내상품 이입이 위축되면서 일본상인이 수입상품을

중심으로 서울 상권에 대한 장악을 급격히 진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태웅의 「1910년대 '京城府'의 유통체계 변동과 韓商의 쇠퇴」는 1910년 강제 병합 후 서울이 '식민지' 상업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의 일단을 살폈다. '식민지' 요건은 러일전쟁 후에 이미 구축되기 시작했지만, 1910년 이후의 시점에서 서울은 금융기관의 중심이자 철도 통신의 기점이라서 다른 어느 항구나 도시들보다 훨씬 빨리 '식민지' 상업도시로 변모할 조건이었다. 유통부문이 자연히 일본상인 주도로 재편되어 '南村'을 비롯한 주요거점이 점차 확대되어 한국상인의 상업지구까지 그들에 의해 잠식되는 상황을 고찰하였다.

서울 거주 일본인의 수는 1910년 현재 4만명을 상회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업 종사자는 30% 정도였으며, 서울시장의 무역규모는 개항장인 부산, 인천에 버금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완제품 내지 일상용품의 수입집산지이자 원료 중간공급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한국상인들이 유통체계의 하부에 자리잡게되는 과정도 정리되었다. 일본상인은 전품목에 걸쳐 무역업과 도매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한 반면, 한국상인은 곡물, 해산물 등 한국산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도매를 하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일본상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일용잡화를 소매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의 영업규모의 격차는 191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벌어져, 1/2에서 1/5로 하락하였다고 한다. 경성부의 유통부문은 민족별로 분단화되고 영업규모에서도 민족별로 양극화하는 추세였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지구에도 변동을 가져왔다. 즉 1910년대 후반에 일본상인들은 본래의 구역인 남촌에서 벗어나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경성부의 동부, 서부까지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상인들의 오랜 거점인 북부까지 침투하였던 반면, 한국인들은 서울외곽으로 쫓겨가는 형세가 되었다고 한다.

허영란의 「1920-30년대 '京城'의 도·소매상업」은 1910년대의 서울상권이 양극화 하는 양상이 1920년대 이후 더 확대되어 간 것을 심층적으로 살폈다. 이 연구는 먼저 일본 강점기 서울의 소매상업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서로 다른 구매력과 소비취향에 의해 좌우된 점을 지적하고 한국인의 '북촌상가'와 일본인의 '남촌상가'가 도심의 상점을 이용할만한 구매력을 가진 한국인 중상류층 고객을 들

러싸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살폈다. 강점기를 거치면서 서울의 상업은 그 외형과 성격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점포와 상설시장이 생겨났으며, 소비문화의 현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백화점이 등장하였고, 도심의 상점가는 각종 접객업소와 오락기구가 집중해 있는 변화가로 변모한 사실을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는 곧 일용품의 유통 및 소비양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주민의 대다수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안정적인 구매력을 갖는 소비집단이 형성됨으로써 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상업기구 및 유흥 오락기구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근대 도시이자 '식민도시'인 서울의 상업적 분위기는 193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안정적인 모습이 어느정도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의 도시화는 도시빈민층의 형성과정이었다는 점도 유의하였다.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업기구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상설점포나 시장이 아니라 노천시장, 임시시장 그리고 노점행상 등의 영세상인이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안정된 직업을 갖지 못한 도시빈민층은 그 자신이 영세상인을 배출하는 저수지 노릇을 하였으며, 그것은 소매상인의 과잉이라는 만성적인 도시문제로 표출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이상 세편의 논고를 통해 드러난 개항 이후 1930년대까지의 서울 상업의 모습은 강제된 식민지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의 결정권과 상권 자체를 이미 남에게 빼앗기거나 종속된 상태에서 상업활동이 활기를 떨 수 없다는 것은 不問可知이다. 1930년대의 도시적 외양이 아무리 현란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세기 탕평정국 아래 새로운 상업적 재원의 고른 분배를 추구했던 시대의 신선한 활력에는 결코 비길 수 없는 것이다. 15세기 초 이래 서울 상업 변천의 긴 역사를 縱觀할 때, 개항 후 특히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이후의 서울 상업의 모습은 큰 명자국이란 소감을 떨칠 수 없다.